

겉도는 학폭대책위...예방보다 사후처리 급급

〈학교폭력〉

학교측에 유리하게 구성...진상파악 제대로 안고 징계 위주

빈발하는 학교폭력 효율 대처 못해 가해·피해자 모두 불만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처리 현안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광주지역 초·중·고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겉돌고 있다.

학교 측에 유리한 위원회 구성과 까다로운 회의 개최 요건,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등으로 애초 운영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왔다. 징계만을 위한 '대책위'라는 지적도 있다.

대책위가 결할기 식으로 진행되고 사안에 비해 학생들이 과도한 징계를 받을 수도, 혹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책위가 사건 정황이나 진상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징계 등 사후처리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한계론도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A고교 대책위는 지난달 말 학교폭력 신고접수(공문)를 받은 뒤 회의를 열어 전 중학교 후배를 때린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 3일(12시간·선도조치 3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가해학생의 어머니는 대책위에 출석해 "아들이 후배를 때릴 당시 같이 있던 친구 3명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정상 참석되지 않았다.

해당 학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1호~9호) 중 서면사과(1호)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A학교 측은 "진술서에 해당 학생이 때

렸다고 돼 있다. 때린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 여러정황을 감안해 최소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학생 학부모는 "대책위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당시 강제적으로 후배를 때렸다고 말했다"면서 "아들은 병원 치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대책위원과 통화를 했는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무조건 '반성하느냐'고만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이는 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대책위 측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징계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에선 학교 측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대책위의 형식적인 운영이 학교폭력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는 각 학교에서 학생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자치위를 열어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기보다 덮거나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경

향과 무관치 않다.

현행 학교대책위는 해당 학교 교감과 교사·법조인·의사·경찰·학부모 대표 중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사 5~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대부분이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교육전문가는 "대책위의 경우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빈발하는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 예방활동이나 인성교육 추진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안경찰청은 이날 중학교 동창의 알몸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로 A(16·광주 모 고교 1년)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학폭 가해학생·학부모

10%가 특별교육 외면

일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학폭' 특별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방지 대책이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이다. 미이수 비율은 학생보다 학부모가, 전남이 광주보다 더 높았다.

자유한국당 엄동열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학년도 특별교육 대상자 및 이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간 광주·전남 학교폭력 특별교육대상 학생 수는 모두 5955명으로 이중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학생(182명)·학부모(408명) 수는 모두 590명(10%)이다.

가해학생 미이수율은 3.05%(182명)인 반면 학부모는 6.85%(408명)에 달했다.

광주지역 가해학생과 학부모 미이수율은 1.22%(35명)·4.92%(141명)인 반면 전남은 각각 4.75%(147명)·8.64%(267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특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낮 아파트 화재...주민들 대피

광주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이 24일 오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 15분에 발생한 화재는 15분 만에 진화됐으며, 대피 과정에서 주민 2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광주 서부소방서 제공>

분양사기 틈타 배불린 건설업자 징역 2년

대부업 위반 60대는 집유 3년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 분양사기'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횡령과 공인중개사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6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C(58)씨에게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4억여원을 횡령하고, 오피스텔 5가구를 중개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차례에 걸쳐 C씨에게 21억원을 빌려준 뒤 106회에 걸쳐 31억5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대부업 등록 없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선 금액(8억1921여만원)을 받아 채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지난해 5월23일 오후 광주 모 카페에서 여사장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농성동 오피스텔 이중 분양 사기'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성동에 있는 G오피스텔 482가구 중 80% 정도를 7000만~8000만원에 정상 분양한 뒤 이를 다시 절반 가격에 중복 분양한 사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명절음식 먹자는 80대 넘어뜨리고 초등학생에 폭언
흥기 소지하고 개 7~8마리 끌고다녀 주민들 '벌벌'

'섬마을의 공포' 막가파 동네조폭

보복 두려워 진술 거부하기도

경찰, 문지마 폭행 40대 구속

수십년간 함께 살아온 고향 섬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4일 마을 주민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해·폭행·협박 등)로 박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여수시 금오도 한 마을 회관 앞에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김모(여·84)씨와 또 다른 김모(여·81)씨 등 2명의 얼굴,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교회로 향하던 승합차를 세운 뒤 특별한 이유없이 신도들을 폭행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이었던 지난해 9월15일 박씨는 이웃집에 사는 이모(여·81)씨가 명절음식을 함께 먹자고 부르자 밀어 넘어뜨렸다. 하루 뒤인 9월16일에는 마을 앞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을 찾아가 "너는 누구냐"며 낚싯대를



빼앗아 폭행한 뒤 흥기로 위협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초등생(11)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죽여버린다. 학교에 다니지 말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대부분 70대 노인인 마을 주민들은 키 180cm 건장한 체격의 박씨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다. 조울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흥기를 소지하고 개 7~8마리를 끌고다니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 식당 업주들은 박씨가 나타나면 두려워 일찍 문을 닫기도 했다.

여수경찰은 강력2팀 형사 5명을 현장으로 보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추가로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를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세월호 화물칸서 37일만에 뼈 1점 수습

세월호 화물칸 수색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조각 1점이 수습됐다. 지난달 18일 세월호 선체 인접 구역 부두에서 치아 1점을 수습한 뒤 37일만의 발견이다.

24일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세월호 2층 화물칸(C-2 구역)을 수색하던 중 뼈 1점을 발견했다. 이 뼈는 세월호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나왔다.

화물칸에서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됨

에 따라 아직 찾지 못한 5명의 미수습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부는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부위 및 뼈의 크기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5월 16일 3층 중앙 우현(3-6)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발견된 다수의 유골이 허다운(당시 2학년)양으로 확인된 바 있어 수습본부는 이 뼈가 다운양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예쁜 옷 보자 욕심이...100만원 상당 아동복 훔친 주부



○생후 5개월된 여자아이를 둔 30대 전업 주부가 백화점 매장 3곳에서 100만원 상당의 아동복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24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A(여·38)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광주 시 동구 모 백화점 유아복코너를 돌며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3곳에서 총 95만원 상당의 아동복 9점을 가방에 넣어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산후 우울증약을 먹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기분전환 겸 딸아이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했는데 예쁜 옷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

호텔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융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